
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참 고 자 료</h1> <h2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</h2>	
---	--	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/ 금융감독원 법무실			
책임자	권대영 금융정책과장 (2156-9710)	담당자	김영근 사무관(2156-9712)	
	박홍석 법무실 국장 (3145-5910)		양진태 법무3팀 팀장(3145-5915)	
배포일	2015.12.30.(수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4매

## 제 목 :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, 국무총리 훈령으로 1월 4일부터 시행

### 1. 개 요

- '15.12.30(수), 국무총리 재가로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제정 확정
  -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규제개혁 과정에서 정립된 내용을 상시화·제도화하고자 하는 조치
  - 금융위, 금감원 등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신설·강화하거나, 감독하는데 있어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절차를 규정
- ⇒ 이는 개별 부처가 소관 규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부 규제운영 규정을 마련한 첫 번째 사례

- '16.1.4(월),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 예정

- 향후 이 훈령에 따르지 않은 행정지도, 감독행정은 무효

< 참고 : 금융회사가 향후 행정지도 공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>

① 행정지도인지 감독행정인지 여부 및 관리번호	⑤ 관련 법령
② 내용 및 목적	⑥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내용
③ 유효기간	⑦ 법령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사, 배당, 금리, 수수료 개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지도 사유
④ 담당자 정보(금융위 : 과장급 이상, 금감원 : 국장급 이상)	
※ 감독행정 공문은 "③ 유효기간"을 제외하고는 동일	

## 2.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

- 금융개혁은 『경쟁』 과 『혁신』 을 통해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현시킴으로서 국민의 편의 제고

### ① '자율'에 기반한 '경쟁'이 가능하도록 감독과 규제 개혁

- 코치, 과도한 검사·제재, 구두·비공식 지도(그림자규제) → 심판, 컨설팅 검사 방식, 문서·공식적 지도로
- 경쟁과 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→ 과감히 폐지·개선

### ② 새로운 제도 도입 등 '혁신'의 토대 마련

은행	▪인터넷전문은행(23년만의 은행업 인가), 계좌이동제,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은행산업 본격 경쟁 시작
자본	▪거래소 개편, 클라우드 펀딩 도입, 사모펀드 규제완화, ISA 도입 등 대출에서 투자로의 자본시장 혁신
보험	▪보험상품·자산운용 규제 전면개편,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등 22년만의 보험산업 개편
핀테크	▪핀테크 규제개선, 핀테크 인프라 테스트 베드, Open API 구축,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금융과 IT가 융합된 새로운 금융모델 창출

-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제정을 통해 금융위·금감원이 규제와 감독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율

- ① '15.10월부터 민간 법률·금융 전문가(8인)로 구성된 제정위원회를 통해 조문별로 하나하나 심도있게 논의(3회 개최)
- ② 공청회(11.26일), 입법예고(12월) 등을 통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반영
- ③ 상급기관 명령인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하여 구속력 강화

### 3. 주요 내용

◇ 금융위·금감원은 **금융개혁** 과제로 **법령규제개혁**(6.15 발표) 및 **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혁**(9.18 발표)을 추진  
→ 개혁과정에서 정립된 내용을 「**금융규제 운영규정**」에 반영

① **(법령규제개혁)** 금융위 규제를 **전수조사**(1,064건)하여 **유형화\***한 후, “**합리화 기준**”에 따라 규제 하나하나를 검토 → 총 **211건 개선**

\* 4개 유형 : 건전성, 영업행위, 시장질서, 소비자보호

○ **영업행위** 규제는 대폭 **완화**하고, **건전성** 규제의 **국제정합성**을 제고하는 한편, **시장질서·소비자보호** 규제는 **강화·정교화**

#### 〈 금융규제개혁 7개 합리화 기준 〉

①사전규제→사후책임 강화, ②선진사례 벤치마킹, ③오프라인→온라인, ④포지티브→네거티브, ⑤업권별·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추어 경쟁촉진, ⑥금융사고로 강화된 규제정비, ⑦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

➔ **규정화** : 규제 신설·강화시 **7개 합리화 기준** 검토를 **의무화**

② **(그림자규제 개선)** 입법기술상 한계,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등으로 **행정지도** 및 **감독행정**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**남용** 방지를 위한 **통제가 필요**

○ 낡고 비합리적인 **행정지도**를 일괄 정비하여 **대폭 감축**

\* ('14년말) 약 700여건 → ('15년) 현재 50건

○ 문서주의 원칙에 따른 구두지시 금지,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하는 **불이익조치 금지**, **절차의 투명성** 원칙과 절차 마련

➔ **규정화** : **행정지도**, **감독행정**에 대한 원칙 및 금융위·금감원 내부 통제 절차 등을 마련

③ **(경영개입 금지)** 특히 **금리, 배당, 수수료, 인사** 등 **금융회사 내부** 경영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**개입 금지**

④ **(상시개선시스템 구축)** 지속적인 **규제개혁**을 위해 신설·강화 규제, 금융행정지도 등에 대한 **모니터링 장치** 마련

① 금융위·금감원 내부 **자체규제심사위원회\*** 역할 강화

\* 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

- 신설·강화 규제가 “합리화 기준”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전심사

- 기존에 공표한 규제개선 과제의 후속조치 상황 점검 등

② **옴부즈만, 외부기관 실태평가** 제도 도입

- 은행·보험 등 업권별 **옴부즈만**이 금융위·금감원의 훈령 준수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

\* 옴부즈만 활동결과, 권고에 대한 금융위·금감원의 조치는 매년 12월 공개

- **외부 전문가**를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위·금감원의 훈령 이행 실태를 점검·평가하고 **매년 12월** 공개

③ **훈령의 실효성** 확보를 위해 **상벌·교육**을 규정화

- 훈령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**포상** 또는 **인사상 조치**를 하고, **신입 직원**에 대한 **정례 교육** 실시

⑤ **(훈령 적용대상)** 금융위 소관 법령, 금감원 규칙, 기타 금융회사등에 사실상 부담이 되는 **금융유관기관\***의 지침 등

\* 예금보험공사, 산업은행, 한국거래소, 한국예탁결제원, 금융투자협회 등

○ 법령은 아니지만 사실상 금융회사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**금융유관 기관의 지침** 등에 대해 **투명성 제고** 등을 권고

[첨부] **금융규제 운영규정 전문**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<http://www.fsc.go.kr>

